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oldfaith.net

특별호는 주일에는 읽지 마시고 평일에 읽어보십시오

현대사회문제 | '혁명'의 시작인가

[김대중, “‘혁명’의 시작인가,” 조선일보, 2016. 12. 20, A34]

다음 대권을 노리는 민주당 문재인씨의 본색(本色)이 드러나고 있다. 사드 배치 반대, 한·일위안부합의 및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 등 박근혜표 외교를 거의 백지화하더니, 드디어 “당선되면 북한부터 먼저 가겠다”며 친북 노선을 거리낌 없이 천명했다. 그뿐이 아니다. “이번에 촛불 혁명의 힘으로 제대로 바뀌보자”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기각하면 “다음은 혁명 밖에 없다”고 했다.

문씨는 ‘최순실 게이트’ 이래 헛갈리는 발언들을 해왔다. 때로는 엄청 강경했다가 때로는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하는 등 박 정부에 실망한 일부 보수층과 중도층을 겨냥한 ‘미끼’를 던지더니, 이제 촛불의 위력이 굳어지는 듯하니까 마침내 본심을 드러내는 것일까? 아니면 촛불을 총지휘하는 지휘탑이 그의 유연함을 연약함으로 질책하고 차기 대선의 왕관을 세상판 뒤엎기로 보상하기로 한 것일까?

어떤 경우든 이제 박근혜의 실정으로 야기된 ‘촛불 사태’는 그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 촛불은 더 이상 박근혜 탄핵에서 멈추지 않는다. “촛불 혁명의 힘으로(세상을) 한번 제대로 바뀌보자”는 것이고, 단순히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보수적 노선을 일거에 폐기하고 좌파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옛그제의 촛불이 박근혜 탄핵에 그치지 않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퇴진까지 요구하며 현재의 심리를 협박하는 것은 이제 촛불이 좌파 혁명의 길로 가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씨류(類)의 촛불 세력과 맞서는 반대쪽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의 행보는 일사천리다. 그동안 보수나 중도층에서도 많은 사람이 박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들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질책하면서 그의 퇴진 요구에 동참해왔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권력 남용의 개선과 정치 구조의 개혁과 진척을 위한 것이었지, 법치를 넘어서는 정치혁명은 아니었을 것이다. 법에 따라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선거를 통해 다음 정부와 대통령을 선출하지는 것이었지, 현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돼도 비법적(非法的) 혁명으로 정부를 뒤엎지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에의 동참은 그들이 원한 것이든 아니든 결국 혁명에의 동조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혁명’을 바란 것이 아닌 사람들이라면 더이상 ‘촛불’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제는 보수·중도층의 뜻과 바람을 담아낼 정치적 ‘그릇’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을 대변하거나 대신할 정치 도구는 정당이고 그 정당은 새누리였다. 그 새누리당이 지금 궤멸의 길로 가고 있다. 그들끼리는 분당이니 제3세력이니 하고 떠들어대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그것은 보수 정당의 자살일 뿐이다. 지금 여론상 40%의 지지를 얻고 있는 민주당과 맞서 그들의 집권을 막고, 설혹 지는 경우라도 새 여당을 견제하고 좌파의 길을 막아야 하는 보수 정당의 사명으로 볼 때 새누리당의 분당은 최악의 적진 분열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야당의 혁명 위협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보수·중도층도 함께 죽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금 친박과 비박은 성정상 동거(同居)하기 어려운 파탄 가족인 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새누리 역시 오늘날 탄핵 사태를 유발한 정치적 공범이고 방관자였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기들 정치 생명을 걱정하기 이전에 세상판 뒤엎기의 위협 앞에 불안해하는 이 나라 보수·중도층의 생각을 대변할 더 큰 책무가 있다. 그 세월 좋은 때 오늘의 새누리를 만들어주고 먹여주고 키워준 국민이 허탈해 있는 상황에서 친박·비박이 서로 샷대질하며 사느니 못 사느니 하는 꼴은 정말 가관이다. 배은망덕도 유분수다.

친박과 비박은 타협해야 한다. 서로의 감정을 잠시 접고, 서로의 다름을 잠시 숨기고, 비록 ‘각방을 쓰더

라도 한 지붕을 벗어나지 않는' 리더십이 아쉽다. 자기 들끼리의 불협화음도 조절하지 못하는 정치력으로 다른 정당이나 집단과 어떻게 대응하고 싸워나갈 것인가? 박 대통령은 조만간 퇴진할 수밖에 없다. 그는 현재가 탄핵을 가결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현재가 기각한다고 해도 그는 대통령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못할 것이다. 그의 통치 능력은 효용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결국 박 정부도 끝나고 새누리당도 해체되고 새로운 대선 주자도 찾지 못하면 이 땅의 보수는 설 곳이 없다.

결별을 봉합한 새누리당이 박근혜 탄핵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대선 체제를 갖춘다면 대선에서 경쟁력 있는 주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길을 터 줄 마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헌의 길로 나설 수도 있다. 집권이 장중에 들어왔다고 기고만장한 민주당으로서는 개헌으로 시간을 끌거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싶지 않겠지만 새누리당이 협력하면 야권 내 개헌 추진 세력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그것 또한 좌파의 '혁명'을 막는 길일 것이다.

반기문과 인명진 그리고 保守

[류근일, "반기문과 인명진 그리고 保守," 조선일보, 2016. 12. 27, A30.]

새누리당이 분당하면서 친박-비박 사이에는 '가짜 보수, 진짜 보수' 논란이 불거졌다. 진짜 보수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론적 조명은 유명한 사상가들의 책에 다 나와 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새삼 들먹일 필요는 없다. 보수 앞에 '개혁적' '합리적' '중도적' '정의로운' '따듯한' 같은 수식어를 붙이는 것도 작위적으로 보인다. '우리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걸 부각하려는 것이겠지만, 그런다고 보수-진보 표(票)를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보수란 정말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한국 보수의 양보할 수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될 최소치(値)는 '안보 정통주의'라 해야 할 것이다. '시장 정통주의'도 물론 보수의 기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엔 보수도 '복지 예스(yes), 갑(甲)질 노(no), 시장 실패 보완'이라는 필요에 무관심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민생 대책에선 보수도 '진취적'인 정책 수단을 가져다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안보에선 다르다. 안보에서마저 보수가 본연의 원칙주의를 양보한다면 그 보수엔 더 이상 보수라 칭 만한 게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보 현실에서 보수의 원칙을 지키며 산다는 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에 한 말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 "개성공단 재개, 사드 배치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국정원 그대로 둘지 심각하게 판단." "청산과 개혁 위해 시민사회 참여의 사회 개혁 기구 구성." "거대한 가짜 보수 정치 세력을 핏물로 불태워버리자." "역사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정책 집행 중단해야" 이런 물론 문재인 전 대표 나름의 '양심의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보수라고 자처하려면 그런 문재인적 '양심의 자유'에 동조하거나, 그것에 떠밀려가거나, 그것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한·미 공조보다 '남·북 공조'가 더 일러야 한다"는 듯한 순서 매김, 전 세계적인 대북 제재와 달리 개성공단을 즉시 다시 열자는 듯한 발언, 한·미 사이에 이미 약속된 사드 배치를 뒤로 미루자는 듯한 어투, 국가 정보기관을 "고치자"고 하기보다 "그대로 둘지..." 회의(懷疑)하는 말, 시민사회(운동단체?)가 참여하는 사회 개혁 기구 설치 같은 생경한 논리, 현행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선 아무 비판 의사도 없는 듯한 시각 등 이런 입장에 정면으로 '노'라고 말해야 그제 한국적 보수의 최저선(線)일 것이다.

이 최저선을 지키지 않으면 제아무리 근사한 '합리적' '개혁적' '중도적' 운운의 수사학으로 치장한다 할 지라도 그거야말로 걸만 번지르르한 위선적 보수다. 새누리당의 친박계와 비박계는 지금 서로 "내가 진짜 보수, 너희는 가짜 보수"라 하고 있지만, 보수 적통(嫡統)의 기준은 '안보 정통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설정하고서 싸워도 싸워야 할 것이다.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따질 때 친박과 비박엔 각기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친박 등 새누리당은 그동안 통진당 해산, 개성공단 폐쇄, 국제적 대북 제재, 역사 교과서 등에서 보수의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신임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그와는 사뭇 달라 보인다. 그는 말했었다. "개성공단 같은 걸 북한에 여러 개 만들어야... 지금은 통일을 말할 때가 아니라 경제 협력을 할 때...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우리가 앞장서 주선해야."(2015년 6월 14일 언론 인터뷰) 그렇다면 새누리 잔류파는 앞으로 어디로 간다는 것일까?

비박 탈당파는 '개혁 보수'를 자임하면서 '반기문을

영입해 국민의당과 제3의 빅 텐트를 치겠다'는 꿈을 꾸려면 풀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게 있다. 그 제3의 빅 텐트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정파가 되는 것인가, 반대하는 정파가 되는 것인가? 안철수·박지원은 '사드 반대'다. 김무성·반기문은 '사드 찬성'일 것으로 알려졌다(잘못 안 건가?). 그렇다면 그 넷이 어떻게 한 텐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인가? 반기문은 박지원에게 신(新)DJP 연합을 제안했다고도 한다(23일 TV조선-박지원 전화 인터뷰). 사실이라면 더 어리둥절해진다. 반기문은 무슨 셈법에서 박지원이 '사드 배치-개성공단 폐쇄 반대'라는 걸 알았을 터인데도 그와 연합하려 했을까?

새누리당은 갈라섰다. 하지만 양쪽이 경제에선 차별성을 보이더라도 안보에선 보수 원칙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수립’에 대한 의도적 기억상실증

[장규형, “‘대한민국 수립’에 대한 의도적 기억상실증,” 명지대 교수 현대사.]

한국의 지식 사회는 심각할 정도로 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논쟁을 하다가 자신이 틀린 것을 알게 되어도 승복하지 않는다. 진정한 학술 토론도 이뤄지기 힘들다. 지식 사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나 추종 세력이 많은 사람이 틀린 얘기를 하면 지적하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학술회의에 단체로 몰려와 근거 없이 고함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요즘 온갖 단체·언론·방송에서 갑자기 국정교과서 공개본의 대한민국 '수립'이란 단어를 불경한 표현이라고 매도한다. '건국'보다는 약하고 중립적인 이 표현이 '친일 세력 옹호'니 하는 무시무시한 단어로 둔갑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 병리현상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기에 세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승만 박사가 1948년을 건국 또는 대한민국 수립이라 얘기한 적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물론 이승만은 1919년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와 제헌의회는 1948년 8월 15일을 독립 기념일로 명명했고 거기에 따라 1949년 8월 15일 '제1회 독립 기념식'이 중앙청 광장에서 열렸으며 이승만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민국(民國) 건설 제1회 기념일"이라 언급했다. 그런데 그해 6월에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회

부됐고, 4대 국경일인 3·1절, 헌법 공포 기념일, 독립 기념일, 개천절 중에 헌법 공포 기념일을 '제헌절'로 바꾸고 독립 기념일을 '광복절'로 바꾸는 수정안이 9월에 통과되면서 독립 기념일이 광복절로 바뀌었다. 4대 국경일을 절(節)로 통일하지는 취지였다. 그래서 1950년 8월 15일에는 제2회 광복절 기념식을 거행했고, 1951년 8월 15일에는 제3회 광복절 기념식이 거행됐다. 며칠 전 있었던 한 학술회의에서 이러한 얘기를 들은 어떤 교수는 회의가 끝난 후 "그런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필자에게 얘기했다.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면 되지 근거도 대지 않고 그냥 못 믿겠다고 한다. 차라리 "믿기 싫다"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했을 것이다.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이란 문구가 3·1운동과 임시정부·독립운동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며 무차별적으로 비방하는 일부 학계와 언론의 행동은 더 해괴하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의 소중한 의미를 부정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러한 가치를 부정한다는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이다. 먼저 교육부가 2015년 9월에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확정할 때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의 사용을 예고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 용어를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의아하다. 더군다나 국정교과서 공개본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문장이 도대체 어떻게 임정을 부정하고 친일 세력을 옹호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공개본의 그 대목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더 중요한 사실은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란 단어는 이미 예전부터 교과서와 여러 책에 계속 써왔던 용어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은 건국절 논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대표적인 한국사 개설서인 이기백 교수의 '한국사신문'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성립'이라 서술하고 있고, 1948년 설을 가장 격하게 부정하는 이만열 교수도 자신이 편찬한 '한국사연표' 290쪽에 그날을 '대한민국 수립 선포'라고 명확히 표기했다. 교과서를 보자면 1차와 2차 교육과정에서도 이 단어는 압도적으로 많이 채택됐었다. 3차부터 6차까지의 국정교과서에서도, 7차 교육과정 한국 근현대사 김인정 교과서 6종 중 4종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개정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6종 중 3종, 현행 교과서 중에서도 비상교육출판사 간행본에 '대

한민국의 수립'이라 서술됐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과서들과 책들은 '임정을 부정하고 친일 세력을 옹호'한 사람들인가?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가 아니면 지적인 자기기만에 빠진 것인가. 일부 역사학계와 정치권의 자기당착적 주장과 여기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일부 방송·신문들은 깊이 반성하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국 좌파가 맹종하는 마오쩌둥(毛澤東)은 이런 명언을 남겼다. "조사하지 않으면 발언하지 마라." 어느 사안에 대해서건 조사하지 않아 잘 알지 못하면 발언하지 말란 경구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 수립'이란 단어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적인 진실성을 결여한 사람들이라 할 수밖에 없다. 역대 교과서들과 관련 책들을 찾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비판한 사람들은 마오쩌둥의 경구를 마음에 새겨라.

檢定 역사 교과서, 제 눈의 들보는 안 보고

[김태익, "檢定 역사 교과서, 제 눈의 들보는 안 보고," 조선일보, 2017. 1. 4, A31.]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국정(國定) 역사 교과서 반대 운동에 앞장선 대표적 역사학자다. 그가 주도해 쓴 검정(檢定)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박정희 사진이 딱 한 장 실려 있다. 1961년 5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군복 차림에 검은 선글라스 끼고 서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기서 박정희는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아니다.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보는 것은 '군사정변 주역 박정희'일 뿐이다.

주 교수의 교과서에 어떤 대통령은 사진이 너 장 실려 있다. 대통령 취임식과 민주화 운동, 김정일과의 남북 정상회담 때 모습이다. 하나같이 당당하거나 환하게 웃고 있다. 교과서는 1998년 그가 베트남 호찌민 묘소에 가 헌화하는 사진을 신고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썼다. '신선한 충격' 같은 주관적 표현은 이제껏 어느 역사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없다. 교과서가 어느 대통령을 '미화(美化)'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책이 나오기 전부터 '박정희 미화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들 했다. 그러나 새 교과서를 조금만 찬찬히 들춰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10월 유신을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 체제였다"고 썼다. '굴욕적 한·일 회담'의 한계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민의 정당한 시위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 사례도 열거했다. 오히려 너무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새 교과서는 물론 대한민국의 성취와 발전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화'와는 거리가 멀다. 대다수 국민이 아들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역사 교과서 '정상화(正常化)' 쪽에 가깝다. 새 교과서가 진선진미(盡善盡美)하다는 게 아니다. 검정 교과서들은 남의 흠 잡기 전에 우선 제 눈의 들보부터 봐야 한다.

국정·검정을 혼용(混用)토록 하겠다는 것은 '단일 교과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정 포기 선언이다. 그런데도 반대 진영에선 즐기차게 새 교과서 '완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아예 인쇄 자체를 막아 씨앗 단계에서 밟아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국정 반대 논리는 단일 교과서가 교육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좌편향이 대세를 이루는 교육 현장에 새로운 사관(史觀)의 교과서 하나를 넣어 혼용시키는 것조차 막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다양성을 죽이는 것이다.

해마다 60만명이 고교에 진학해 역사 교과서를 배운다.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이 된 작년부터 교과서는 더 중요해졌다. 2년이면 120만명, 지난 대선에서 승패를 가른 표 차이만 한 숫자다. 이만하면 그들이 푹푹 문쳐 검정 교과서를 사수하려는 이유를 알 만하다. 검정 교과서는 자기들 노선과 이념으로 주입된 미래의 유권자를 키워내는 더없는 정치 수단인 셈이다.

새 교과서 필진 중 상당수가 관련 학회의 대표를 지냈다. 이들은 1년 넘게 고생한 대가로 집필료·자료조사비 합쳐 한 사람당 2000만원 정도 받았다고 한다. 검정 교과서 필자들이 60만 독자를 가진 출판 시장에서 해마다 인세를 챙기고 도덕적 우위를 차지한 것처럼 큰소리치는 것에 비하면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질은 새 교과서 쪽이 팔목상대할 만하다. 그들은 이래저래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이 두려운 것이다.

책 안내 전화: 02-334-8291. 송료는 1,000~5,000원입니다.

계좌: 농협 302-0401-6652-61 예금주: 김효성

- 김효성, 기독교 교리개요. 제9판. 96쪽. 1,000원.
- 김효성, 요한복음 강해. 281쪽. 3,000원.
- 김효성, 마가복음 강해. 223쪽. 2,000원.
- 김효성, 조직신학. 605쪽. 6,000원.
- 김효성, 구약성경강해. 1권, 878쪽. 9,000원.
- 김효성, 구약성경강해. 2권, 1001쪽. 11,000원.
- 김효성, 신약성경강해. 제2판. 1014쪽. 11,000원.